

대학부설연구소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박 준 식 / 계명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연구처장

우리나라 대학부설연구소는 적어도 양적인 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연구소가 운영되는 양상을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연구소의 난립화, 육성정책의 미흡, 재정 취약, 활동 미약, 평가체제의 미비, 전임연구원의 부족, 연구소장에 대한 동기부여 미흡 등이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여 연구소가 경쟁력을 갖추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차별적 지원과 통합의 기준으로 삼는다. 둘째, 연구소를 주제와 지역적 관점 등에서 특성화하고 기능적 관점에서 개성화시킨다. 셋째,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과가 미미한 연구소는 평가결과에 따라 통합한다. 넷째, 정부와 대학 당국의 재정 지원 강화와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다섯째, 개별 연구소들의 자구적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1. 머리말

최근 UR의 여파로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논의되고 대학마다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많은 제안사항이 도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혁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개혁과제 중에는 교수의 연구능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고안되고 있다. 특히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전담하기 위해 최근 2~3년간 대학마다 연구처를 신설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연구처의 신설은 그간 관심 밖으로 밀려있던 연구소 정책을 재검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대학부설연구소는 국가정책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소나 신상품 개발과 실제 응용을 연구하는 민간 및 기업연구소와는 달리 연구와 교육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두 가지 기능은 고사하고 어느 한 기능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부설연구소들이 매우 자유롭게 설립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도 자유방임적이며, 대학 자체의 관리 및 감시기능도 미약하다. 여러 가지 통계자료가 보여주듯이 있으나 마나한 연구소가 상당수에 이르며, 정부의 지원은 물론이고 대학 자체의 지원도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연구처

라는 연구지원부서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연구소는 대학 본부의 관심영역 밖에 놓여 있었다.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경쟁의식 없이 최소한의 대학 지원 경비로 최소한의 활동만 해왔으며, 연구소장을 비롯해 구성원들은 연구소 활성화를 위한 자구적 노력 없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안주해 오므로써 오늘날 전반적인 연구소 부실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제 연구소 문제를 정면으로 대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각 대학마다 부설연구소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삼아 현상을 분석하고 무엇이 연구소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인가를 밝혀 활성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글은 특히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의 연구소 활성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분석되고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 다루어지는 활성화 방안은 우리나라 대학 부설연구소의 전반적인 상황을 토대로 제안되기 때문에 개별 대학 또는 개별 연구소 단위로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2. 현황 분석

1) 설립 현황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발행하는 『대학부설연구소 총람』(1993)에 의하면 1993년말 현재 전국 대학부설연구소는 인문사회계 1,146개, 자연계 727개 등 모두 1,873개가 설립되어 있다(교육대, 개방대, 전문대 포함). 이 중 국·공립 대학이 29.5%(552개), 사립대학은 70.5%(1,321개)를 차지한다. 4년제 정규대학교(교육대, 개방대, 전문대 제외)만을 대상으로 하면 인문사회계 993개, 자연계 617개 등 모두 1,610개로 전체 연구소의 86%에 이른다.

나중에 논의되겠지만 연구비 수혜는 주로 자연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쟁력이 강한 반면, 인문사회계는 상대적으로 자생력이 취약한데도 연구소 숫자는 월등히 많다.

설립년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1971~80년의 10년 동안 생겨난 연구소는 347개로 전체의 18.53%인데 비해 1981~90년의 10년 동안 생긴 연

구소는 2.5배에 해당하는 866개(46.46%)나 된다. 또한 1991~93년 동안 생긴 연구소도 458개(24.45%)나 된다. 이는 1980년대부터 대학의 양적 팽창이 급속히 이루어진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각 대학마다 아무런 비전없이 경쟁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구소별 연구원 수를 보면 규모의 영세성을 짐작할 수 있다. 전체 연구소 1,873개에 전임 및 겸임 연구원 수가 45,511명으로 한 연구소당 평균 24명에 불과하다. 특히 10명 미만의 미니 연구소가 762개로서 전체의 40%나 된다. 이 수마저도 많은 대학이 복수의 연구소 가입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2) 재정 현황

연구소 재정은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연구비와 자체 기금, 운영비 등이 포함된다. 이들 경비 중 연구비는 일부의 간접경비를 제외하고는 연구원의 개인 몫이며, 기금과 운영비는 연구소 활동비로 쓰인다.

종합대학 전체 1,610개 연

〈표 1〉 대구지역 대학부설연구소 운영형태 (1993년 기준)

구분 \ 대학별	A	B	C	D
연구소 수	16	18 [일반 : 5 특별 : 4 기타 : 9]	20	17 [교책 : 2 일반 : 11 인준 : 4]
교비 지원액	76,214천 원	162,000천 원 (기타 연구소 교비 없음)	112,000천 원	32,500천 원 (인준연구소 교비지원 없음)
연구소별 예산 지원 방법	운영비 : 30만원 + 1만원 × 소원수 행사비 : 연 2회 이내 (50만원) 출판비 : 실제출판 예정액	일반연구소 : 연구소 원 기준 운영비 일정비율 특별연구소 : 사업계획에 의거	연구소원 감안, 기본운영비 동일, 논문발간비는 예산과에서 검토 하여 배정	연구소별 250만 원 동일지급
소원가 입 방법	제한없음	제한없음	1인 1개 연구소	제한없음
예산 집행 방법	예산단위부서와 동 일	좌 동	좌 동	좌 동
연구소 예산에 대한 관리부서의 통제	통제없음	좌 동	좌 동	좌 동
사업실적 평가	형식적 (서식에 의한 보고)	좌 동	없 음	없 음
연구소 신설방법	연구소 설치관계 위원회의 심의	좌 동	좌 동	좌 동
연구소 간접경비 징수	연구소별 규정에 의거 징수	연구규정에 의거 요율에 따라 징수	없 음	없 음
연구소장 수당 및 강의 면제	8만 원, 없음	5만 원, 4시간	9만 원, 없음	10만 원, 2시간
논문 집 발 간 통제나 심의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연구소 가운데 소원이 연구비를 받은 경우는 955개 연구소로 전체의 60%에 해당된다. 나머지 40%는 연간 연구비 수혜실적이 전혀 없는 연구소이다. 소원수 10명 미만의 미니 연구소가 40%인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분야별 대비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인문사회계의 연구소 수는 자연과학 분야보다 월등히 많으면서(인문사회 62%, 자연계 38%) 연구비 수혜 건수에서는 비슷함을 보이고 있으나 액수면에서는 오히려 자연계가 9배나 더 많

다. 특히 공학계는 인문계보다 26배나 더 많은 연구비를 수혜받고 있다. 이는 연구비 지급기관이 산업체가 많고 그들은 응용연구를 선호하기 때문일 것이다.

연구비 수혜실적에서도 1억 원 이상이나 되는 연구소

가 171개나 되는 데 비해, 1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연구비를 받은 연구소는 394개(24%)나 된다. 이들 금액 속에는 순수 연구소 프로젝트뿐만 아니고 소원이 개인적으로 수령한 연구비도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연구비 금액의 영세성은 짐작이 간다.

대학부설연구소 1,610개 가운데 기금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는 501개로서 전체의 31%에 불과하다. 나머지 69%의 연구소는 기금없이 운영되고 있는 영세 연구소이다. 기금을 확보한 연구소는 한 연구소당 평균 5,956만 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다. 기금확보 연구소 가운데서도 5억 원 이상의 대규모 연구소(14개)로부터 2천만 원 미만의 연구소(367개)에 이르기까지 그 격차가 매우 넓고, 2천만 원 미만의 기금확보 연구소도 전체의 73%나 된다.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도 학교지원이 269개이며, 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는 138개에 불과하다(나머지 연구소는 간접경비, 소원의 지원금 납부, 기타 사업 등으로 충당). 대학 자체의 지원을 끊는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연구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연구소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건인 운영비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전체 대학교 연구소(1,610개) 가운데 운영비를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는 1,037개(64%)에 불과하고, 나머지 36%(573개)의 연구소는 아예 운영경비도 없다. 이들 연구소는 간판만 달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운영경비를 확보하고 있는 대학마저도 774개 연구소(기금확보 연구소 1,037개 중 74.6%)가 1천만 원 미만의 영세 연구소이다.

3) 운영 현황

대학부설연구소가 어떠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밝혀 주는 자료는 없다. 또한 운영 양상이 대학마다, 연구소마다 매우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에서 연구소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대구지역의 대규모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운영형태를 조사한 결과는 대학간에 많은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다.

4개 대학 전부가 교비로 운

영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방법은 대개 소원수에 근거하고 있다. 예산집행 방법도 다른 예산단위 부서와 동일하며, 관리부서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연구소 실적에 대한 평가도 받지 않으며, 연구소별 논문집을 간행하는 데 관리부서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 연구소 운영은 전적으로 연구소장의 책임하에 놓여 있다. 연구소 신설도 대체로 자유로우며 소원이 되는 방법도 1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다. 간접경비는 2개 대학에서 부분적으로 징수하고 있고, 2개 대학은 없다. 간접경비를 징수하지 않는 대학은 운영경비를 전적으로 대학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연구소장에 대한 예우는 각 대학이 공통적으로 보직자로 인정하며 일정한 대우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요소가 소장을 개인적 영달의 수단으로 인식, 직선으로 선출하고 잦은 교체로 인해 연구소 정책의 지속성을 해치며, 타성적 운영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3. 당면 문제

이상의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부설연구소는 적어도 양적인 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연구소가 운영되는 양상을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난립 현상

연구소가 독특한 존재 목적과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상당수 연구소가 연구영역과 기능 등에서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연구소를 세우는 목적은 학과나 개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를 합동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다. 예를 들면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의 경우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 때문에, 자연과학의 경우 공동 연구의 필요성 때문에 연구소가 존재한다. 그러나 연구소가 실제 운영되는 양상을 보면 본질과는 너무나 어긋나 있다.

연구소가 난립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들이 연구소의 주된 활동을 논문집 발행으로 보고 연구업적으로 손쉽게 발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왔다는 점이다. 만약 교육부나 대학이 일찍부터 전국 규모 학술지에 발표하는 논문과 연구소 논문집을 차등 평가해 왔다면 연구소 설립의 양적 팽창을 완화시켰을 것이다. 이러한 차별 평가제도는 역으로 현존하는 연구소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연구소를 연구비 수령을 위한 창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비를 지급하는 기관도 연구계획서나 연구능력보다는 연구소의 간판 중심으로 연구비 지급을 결정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하게 된다. 또한 연구소장의 직위를 개인적 출세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고도 난립의 한 요인이 된다.

연구소의 난립현상은 기존 연구소의 핵분열을 가져오고, 목적과 기능상의 중복을 초래하여 어느 한 연구소도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부실화를 가져온다. 이는 연구소의 신설 → 분화 → 경쟁력

약화 → 부실화의 악순환을 일으키는 일반적인 과정이다.

2) 육성정책 미흡

연구소 육성정책은 교육부 차원과 대학정책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부 차원의 육성정책은 지금까지 연구소 단위로 연구과제를 심사하여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이 거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마저도 상위권 대학에 집중되고 지방 또는 중하위권 대학의 연구과제는 대부분이 탈락되고 만다.

최근 교육부는 연구소의 지원 정책 방향을 일부 수정하였다. 과거에는 전 연구소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비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최근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소로 지원자격을 제한하였다. 이는 연구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지만, 기실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원칙적으로 경쟁은 경쟁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94학년도부터 사전 예고도 없이 기준을 강화시켜 경쟁체제를 도입함

으로써 대부분의 연구소들이 교육부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마저도 박탈하고 말았다. 현행 대학평가인정제와 마찬가지로 사전 예고하고 대학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며,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등급별 지원규모를 설정하도록 해야 함에도 갑자기 정책을 변경함으로써 부설 연구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대학 당국의 정책적 차원도 마찬가지다. 대학내 직제상 부설연구소는 대학의 부설기구로서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소가 대학내 행정기구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연구소 육성정책이 대학 당국에 의해 세워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학 내에서 연구소의 설립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도 자유방임적이었다. 대학본부는 연구소 설립을 인가해주고 약간의 운영경비만 예산에 책정해 주면 그 다음 모든 사항은 연구소에 맡겨졌다. 연구소는 과거의 관행과 타성에 젖어 최소한의 목표 달성으로 만족하였고, 외부로부터의 강제 없이

자율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대학에서 국제경쟁력의 확보가 당면과제가 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연구처를 설립하면서부터 연구소 문제가 표면화되기에 이르렀다. 연구처는 대학부설연구소가 왜 필요한지, 연구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체의 관점에서 또는 지역 관점에서 어떤 연구소를 특성화해야 하는지, 잘 운영되는 연구소와 그렇지 못한 연구소는 어떻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육성정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 대학 단위로 연구소 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정책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3) 재정 취약

재정문제는 연구소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학술활동, 소원들의 연구실적을 발표하는 논문집 발행, 연구원의 인건비, 운영경비 등 모든 활동이 재정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부설연구소

의 재정문제는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어 연구소 활성화의 가장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전술한 현황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기금이 없는 연구소가 69%에 이르고, 운영경비가 전혀 없는 연구소가 36%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연구소의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운영경비도 외부기관에서 지원받는 곳은 소수의 연구소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대학 자체에서 지원하는 경비로 운영하고 있다. 필자가 대구지역의 4개 대규모 사립대학교 교비지원액을 조사해 본 결과, 연간 교비지원액 총액이 약 3억 8천만 원이었으며 각 대학 연구소당 평균 지원액은 530만 원에 불과하다. 서울소재 상위권 대학의 응용과학분야 일부 연구소를 제외하면 지방 대학과 중하위권 대학의 대부분이 학교지원경비로 운영경비를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연구소의 연구 활성화란 요원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연구비 수혜실적이 전혀 없는 연구소가 전체의 40%나 되며, 실적이 있는 연구소마저도 약 40%에 해

당하는 443개 연구소가 1천만 원 미만의 연구비를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수 연구소가 간판만 걸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4) 활동 미약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 활동은 학술발표회·세미나·워크숍 등의 학술행사, 논문집·단행본·보고서 등의 발간사업, 국제교류활동, 교육·연수·현장지도 등을 통한 사회봉사 등이 있다. 연구소는 원래의 목적을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구체화하기 때문에 활동 실적이 곧 연구소의 성과를 가늠한다.

먼저 학술회의 개최 문제를 살펴보자. 총람에 따르면 연 1회 이상 국내 학술회의를 개최한 연구소는 623개로서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연 1회 이상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한 연구소는 모두 164개로 전체의 10%에 미달한다. 연 2회 이상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한 연구소는 48개에 불과하다. 1년 동안 학술회의 한번 개최하지 않는 연구소를 어떻게 연구소라 부를 수 있겠는가?

논문집 등의 발행실적은 1,

233개 연구소에서 1,404종을 발행하고 있어 다른 영역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부설연구소들이 과거부터 논문집 발행을 가장 최선의 연구활동으로 간주해온 관행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적 관점에서 내역을 살펴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연 1회 또는 격년간이나 부정기적 발행이 무려 1,102개 연구소에 이르고 연 2회 이상 발행하는 곳은 131개 연구소에 불과하다. 그러나 문제는 연구소 논문집의 질적인 면에 있다. 연구소 논문집은 대체로 평가 및 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 이는 연구소 논문집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이런 연유로 최근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에서는 연구소 논문집을 기타 학술지로 분류하여 전국 규모 학술지와 차별 평가하기에 이르렀다(전국 규모 100%, 연구소 논문집 50%). 이러한 제도는 이미 몇 개 대학에서 시도하고 있고 조만간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단행본 등의 발행실적을 보면, 전체의 30% 정도인 556개 연구소만이 모두 2,846종

을 출판하여 한 연구소당 평균 5종의 발행실적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70%의 연구소는 단행본 발행실적이 전무하다. 국제학술교류 실적도 전체의 약 30%인 557개 연구소만이 다른 나라의 학술단체와 학술교류를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70%의 연구소는 교류실적이 없다.

이상 부설연구소들이 수행하고 있는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보수적 추산으로도 전체 연구소의 절반 이상은 연구소 본연의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평가체제 미비

연구소가 난립하고 부실화되는 요인 중에는 운영과 활동에 대한 평가체제가 미비한 데도 원인이 있다. 평가란 근본적으로 연구소의 활동성과를 분석하여 무엇이 문제인가를 밝히고 대응 태세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부설연구소는 평가에 관한 한 완전 무풍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무관심과 방임의 배경에는 연구소가 독립된 부설기구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기구가 없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연구소의 평가는 잘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와 그렇지 못한 연구소를 판별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이 되며, 연구소 통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평가가 제도화되면 연구소 단위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자구적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이므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릴 수 있게 될 것이다.

6) 기타

연구소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이상 다섯 가지의 핵심적인 문제점 외에도 기타 부수적인 문제점들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기능의 중복성

많은 대학부설연구소들이 핵분열한 결과, 기능상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② 지원기준의 비현실성

각 대학이 연구소 설치에 인정하되, 지원은 외면하고 있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③ 활동에 대한 통제 및

감시 기능 미약

대부분의 연구소가 대학 부설기구이므로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기구가 없어 부실화를 재촉하고 있다.

④ 장·단기 발전계획의 부재

연구소가 장·단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는 등의 자구적 노력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

⑤ 전임연구원의 부족

활동이 활발한 소수의 연구소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전임연구원이 없다. 따라서 연구소의 각종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이 여의치 않다.

⑥ 연구소장에 대한 동기 부여 미흡

최근 민주화 추세에 따라 각 대학의 연구소장을 소원들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연구소장이 자주 교체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연구소 업무의 일관성도 어렵게 한다.

이상 우리나라 대학부설연구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완전히 일반화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연구소 단위로

그 격차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어떤 연구소는 연간 순수운영비가 1억 6천만 원이며, 연간 국내·외 세미나 개최건수 56회, 워크숍 4회, 연간 수탁연구과제 49건에 이르는가 하면, 어떤 연구소들은 아무 활동도 없이 간판만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논의된 문제점은 전체적인 경향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4. 활성화 방안

지금까지 연구소 운영의 부실화 요인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많은 연구소들이 어느 한 요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 문제점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소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결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1) 평가체제의 확립

연구소가 난립하고 기능상 중복되어 운영이 부실화되는

요인 또는 연구소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자구적 노력의 결핍 등 제반 요인의 상당수는 연구소 평가체제의 미비로부터 비롯된다.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에서는 최근 연구소 활성화의 요체를 평가체제에 두고 각 연구소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4단계로 등급화하며, 이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차이를 두기로 하였다. 차등 지원의 형식은 A급은 집중적인 육성지원, 즉 현재의 규모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에서 지원함으로써 활성화시키며, B급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일부 상향조정하고, C급은 현재의 지원액을 감소 또는 취소함으로써 자체 운영 연구소로 격하시킨다. 그리고 D급 판정을 받을 경우 정비 또는 통합 대상이 되며, 연속 2회 D급 판정을 받으면 설립인가를 취소토록 한다. A, B 등급을 받는 연구소의 경우,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① 연구활동의 기반조성
- ② 연구용역 수주를 위한 활동의 강화
- ③ 연구소에서 발간되는 학

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외부심사제의 정착

- ④ 전임연구원 제도의 도입
- ⑤ 연구활동을 위한 제반 기자재의 확보
- ⑥ 국제 학술교류 활동의 강화
- ⑦ 연구를 위한 행정지원의 확보
- ⑧ 재정지원
- ⑨ 학술업적의 차별인정
- ⑩ 연구소장 대우의 향상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가기준의 확립과 평가의 객관성 문제일 것이다. 계명대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을 예시하면 뒤의 <표 2>와 같다.

물론 여기에 제시된 점수는 계명대학교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연구소가 활성화되고 있는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낮은 수준의 것이다. 만일 다른 대학에서 이 기준표를 응용하고자 한다면 평가요소는 적용하되, 배점은 각 대학의 실정에 맞게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여 적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예고가 필요하다. 각 연구소들이 달성 목표를 미리 설정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

으며,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2) 특성화 추진

연구소가 국제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관심영역에서 먼저 특성화되고, 다음은 목적과 기능에서 차별화되어야 한다. 어느 대학에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연구소로는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연구소의 설립목적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 ① 우수논문 발간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 : 국내에서 출간되는 학회지에 준하거나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우수 논문의 발간을 목적으로 함
- ② 산학협동을 위한 연구소 : 산업체에 연구용역, 진단 및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함
- ③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사회의 예술·문화 등의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
- ④ 대학의 창학이념 구현을 위한 연구소 : 대학의 건학이념을 재정립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함
- ⑤ 국제지원을 위한 연구소 : 국가 정책을 지원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연구를 목적으로 함

〈표 2〉 연구소 평가기준표

평 가 사 항		평 가 점 수			
연구소 목적의 명시성 및 달성 정도		이주 높음 (2)	높음 (1)	보통 (0.5)	낮음 (0)
연구소 기능 및 직무의 타연구소와 중복 여부		중복 없음 (2)	1개 (1)	2개 (0.5)	3개 이상 (0)
연구소 장·단기 발전계획 및 전략수립		이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임 (4)	구체적이고 현실적임 (3)	있으나 비현실적임 (2)	없음 (1)
재원조달 계획		" (4)	" (3)	" (2)	" (1)
연구소 운영의 자체평가 실시 여부		1년 1회 이상 (4)	2년 1회 (3)	3년 1회 (2)	" (1)
연구지원 인력 확보사항		자체채용 2명 이상 (4)	자체채용 1명 이상 (3)	자체채용 임시직 (2)	" (1)
학술회의 개최		국제 1건(6), 국내 1건(4), 내부 1건(2)			
초청강연회		국제 연사(3), 국내 연사(2), 내부 연사(1)			
연구과제 처리건수		2점/1건			
소원 연구실적 (연간 1인당 편수)		국제학술지 : 0.5편 이상 (5) 0.4편 이상 (4) 0.3편 이상 (3) 0.2편 이상 (2) 0.1편 이상 (1)	국내학술지 : 1편 이상 (5) 0.8편 이상 (4) 0.6편 이상 (3) 0.4편 이상 (2) 0.2편 이상 (1)		
연구소원의 구성 분포도		본교 교수 + 타교 교수 + 산업체 인사 (2) 본교 교수 (1)			
예산 및 연구비의 관리 및 운영형태		수 (4)	우 (3)	미 (2)	양 (1)
소원의 외부연구비 수혜실적 (○은 자연·공학계열 이외의 계열)		2억원 이상 (10) 17,000만원 이상 (9) 15,000만원 이상 (8) ⑩ 13,000만원 이상 (7) ⑨ 11,000만원 이상 (6) ⑧	9,000만원 이상 (5) ⑦ 7,000만원 이상 (4) ⑥ 5,000만원 이상 (3) ⑤ 3,000만원 이상 (2) ④ 1,000만원 이상 (1) ③ 1,000만원 이하 (0) ②		
학술지 발간		2점/호			
단행본 발간		5점/종			
학술지의 심사		외부 전문가에 의한 심사 (3)	외부 및 내부 전문가에 의한 심사 (2)	내부 전문가에 의한 심사 (1)	심사 없음 (0)
참 고 도 서 확 보	자연·공학계열 에·체능계열	1,500원 이상 (4)	1,000 ~ 1,500 원 (3)	500~1,000원 (2)	500원 미만(1)
	인문·사회· 경 상 계 열	3,000원 이상 (4)	2,000 ~ 3,000 원 (3)	1,000 ~ 2,000 원 (2)	1,000원 미만(1)
시 설 및 기 자 재 확보	자 연 · 공 학 계 열	3,000만원 이상 (4)	2,000~ 3,000만원(3)	1,000~ 2,000만원(2)	1,000만원 미만 (1)
	인 문 · 사 회 · 경 상 계 열	800만원 이상 (4)	500~800만원 (3)	200~500만원 (2)	200만원 미만 (1)
연구소 재정적립금		5,000만원 이상 (6) 3,000만원 이상 (5) 2,000만원 이상 (4)	1,000만원 이상 (3) 500만원 이상 (2) 200만원 이상 (1)		
연구소 사회봉사활동 실적		1년 4회 이상(4)	1년 3회 (3)	1년 2회 (2)	1년 1회 (1)

⑥ 우수연구센터 : 기초 및 응용과학, 과학기술 등에 대한 우수연구를 목적으로 함

또한 연구방법 면에서도 자연과학 계통 연구소의 경우 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인문·사회과학 계통의 경우 학제간 연구가 활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재편되어야 한다.

3) 통합 추진

대학부설연구소는 초창기(80년대 이전까지)에는 비교적 넓은 주제영역으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연구소가 핵분열을 하면서 관심영역이 중복되는 연구소가 많이 생겼으나, 그때마다 기존 연구소가 개편되거나 간판을 내리는 일은 없었다. 그러다 보니 한 대학 내에서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연구소들이 난립하게 되고 대학간에도 중복현상이 심각해짐으로써 연구소 부실화를 재촉하게 되었다.

최근 몇 년 사이 대학의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서 많은 대학에서 연구소를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0개 연구소를 19개로 통폐합하는 연구소 통합기준

을 마련, 과감한 통폐합을 시도한 경희대는 교외연구비 수혜실적을 통폐합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83개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서울대는 연구소의 기능과 운영상태를 평가하여 연구비, 기자재 구입비, 학술회의 경비, 학술지 발간비 등 대학의 지원경비를 차등화하는 정책을 취했다. 아울러 인문대 부설 비법정 연구소들을 지역종합연구소로, 이공대 부설 비법정 연구소들을 자연과학종합연구소로 개편하고, 통합대상 연구소를 점차 확대시키기로 한 바 있다. 또한 계명대도 이미 국제학 관계 3개 연구소(중국어학, 독일학, 일본문화)를 통합하여 국제학연구소로 개편하기 위해 학칙개정작업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통합대상 연구소를 확대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앞에서 제시한 20개 평가항목에 따라 정기적인 연구소 평가를 한 결과, 활동이 미미한(D등급) 연구소는 통합대상 연구소로 지정하는 방향의 연구소 정비 정책을 펴고 있다.

연구소 통폐합 작업은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안으로 현존하

는 연구소의 20~30%는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4) 재정적 지원과 관리 기능의 강화

전술한 바대로 대학 당국은 연구소 설립을 인가한 다음에는 운영에 대해 자유방임적 태도를 취해옴에 따라 연구소를 타성과 잘못된 관행에 따라 파행적으로 운영되게 하였다. 따라서 연구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및 대학 당국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통제기능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정부의 지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연구소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특히 긴급하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대학연구소 지원에 있어서 연구소를 육성, 발전시키는 차원보다는 프로젝트 단위로 소수의 연구소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개해왔다. 이러한 정책은 상위권 대학의 일부 연구소에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연구소들은 교육부 연구비와는 무관하게 방치되도록 만들었다.

정부의 교육부문 예산은 대

략 10조 원에 이르지만 고등교육을 위한 예산은 6천 2백억 원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서 사립대학에 지원되는 규모는 고작 6백억 원대에 불과하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대는 연간 2억 5천만 불을 연구비로 쓰고 있으며, 이 중 45%는 연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지원금액의 엄청난 수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교육부는 연구소 지원에 경쟁원칙을 도입함으로써 외부 연구비 수혜실적이 높은 연구소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잘 하는 연구소는 지원을 강화하고, 못하는 연구소는 고사시키겠다는 정책으로 경쟁사회에 적합한 논리로 보인다. 그러나 게임에는 법칙이 있게 마련인데, 교육부는 전국 대학부설연구소가 똑같은 출발점에서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어느날 갑자기 경쟁원칙을 도입함으로써 많은 연구소들에 좌절을 안겨 주었다. 교육부의 그러한 정책은 최소한 2~3년 정도의 예고기간을 거쳐 각 대학이 준비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어야 옳다고 본다.

대학 당국도 연구소를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일정한 기반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이제 겨우 기어다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갑자기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정비하려는 정책은 연구소 활성화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최소한 연구소가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고 평가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도록 배려해야 한다.

대학 당국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연구소 활동에 대한 관리 및 통제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연구소의 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연구소의 장·단기 발전 계획은 있는가? 연구활동과 결과는 연구소의 목적과 일치하는가? 연구소 운영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등에 대해 연구소가 자유방임적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대학 본부(연구처)가 관여할 필요성이 있다.

5) 자구적 노력

지금까지는 주로 연구소의 외부적 조건을 중심으로 연구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

다. 그러나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개혁하여야 할 부분도 많이 있다.

첫째는 연구소의 장·단기 발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실천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해당 대학이 요구하는 기준이나 교육부의 연구비 신청에 필요한 기준의 달성, 국제연구소, 우수연구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조건의 정비 등을 포함해 연구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한다.

둘째는 연구소 운영의 개방화이다. 대부분의 대학부설연구소들이 해당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구성되고 연구는 개인적인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결과는 심사제도도 없는 연구소 논문집에 발표하고 있다. 또한 국제교류도 별로 하지 않는 등의 폐쇄적 운영을 하고 있어 연구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연구소의 개방화는 소원 자격을 개방하는 일, 국내 타기관이나 국제간 공동연구 또는 공동학술대회를 통한 교류의 확대, 연구소 논문집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외부심사 제도 도입 등의 개혁 작업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셋째는 전임연구원제의 도

입이다. 연구소가 연구활동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에 전념하는 전임연구원이 필요하다. 선진 제국의 대학부설연구소는 연구소 소속의 교수, 강사, 조교가 있다. 연구소의 운영은 실제로 이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적 문제로 전임연구원을 두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조교와 학과 강사를 연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는 연구소장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연구소장은 단순한 보직이나 승진의 발판이 아니며, 그 분야에서 연구업적이나 능력 면에서 최상의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임무를 맡겨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 조직의 성패 여부는 제도보다는 사람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5. 맺는 말

지금까지 대학부설연구소의 설립과 운영 면에서의 현황을 분석하고 당면 문제점을 직시하였으며,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요약하면 ① 연구소의 양적 팽창으

로 인한 기능의 중복과 경쟁력 약화, ② 정부 및 대학 행정차원에서의 정책 미비와 지원 부족으로 인한 연구기반의 취약, ③ 연구소 재정의 취약으로 인한 연구활동의 제한, ④ 학술회의, 간행물 발행실적, 국제교류 등 연구소 고유의 활동 취약, ⑤ 연구소 평가체제의 미비로 인한 경쟁력과 자생력의 저하, ⑥ 연구소 자체의 자구적 노력의 결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연구소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연구소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차별적 지원과 통합의 기준으로 삼는다. 평가영역과 기준, 방법 및 절차는 제안된 바와 같다. 둘째, 연구소를 주제와 지역적 관점 등에서 특성화시키고 기능적 관점에서 개성화시켜야 한다. 셋째, 연구소의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연구성과가 미미한 연구소들은 평가결과에 따라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성을 이루어야 한다. 넷째, 정부와 대학 당국은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연구활동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아울러 연구소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소 자체의 장·단기 발전계획 마련, 연구소 운영의 개방화, 전임연구원제 도입, 연구소장의 전문가화 등 자구적 노력을 통해 연구소 활성화 방안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이 글에서 논의된 현황 분석, 문제점, 활성화 방안 등은 우리나라 대학부설연구소의 현황을 어느 정도 일반화시켜 놓고 분석했기 때문에 모든 연구소들에 공통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지금부터 연구소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대학이나 자체발전계획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소에서 어느 정도 참고자료가 되리라 믿는다. ■

박준식/중앙대학교 도서관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문헌정보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계명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로 있고 연구처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편집위원장으로 활동중이다. 주요 저서로 『한국문헌정보학색인』, 『뉴미디어와 도서관』, 『도서관자료론』 등이 있고, "서양색인과 색인법에 관한 고찰"의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